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개발행위이행보증금 기준초과 예치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현 ○○○○○)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업무 처리 시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허가 이행의 담보로 이행보증금을 받아 예치하는 업무와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60조에 따르면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총공사비의 20%이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에서는 2020. 6. 12. 자체 검토보고<sup>1)</sup>를 통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협의)시 이행보증금 또는 산지복구비를 산정하여 많은 금액을 예치토록 해 오던 기존 처리방법이 「국토계획법」 제60조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위반되어 같은 해 6. 15.부터 [표 1]과 같이 산지복구비와 이행보증금을 예치받기로 하였다.

[표 1] 이행보증금과 복구비 예치 방법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산지복구비가 이행보증금 이상인 경우	· 산지복구비 예치	· 산지복구비 예치
산지복구비가 이행보증금 미만인 경우	· 이행보증금 예치	· 산지복구비 + 이행보증금 잔액 ※ 총공사비의 20%이내
산지 전용 면적 660㎡ 이하 ※ 산지복구비 예치 면제	· 이행보증금 예치	· 이행보증금 예치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 ○○○(현 ○○○○○)에서는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협의)를 하면서 이행보증금과 산지복구비를 합한 금액이 총공사비의 20%를 초과하여 예치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현 ○○○○○)에서는 2020. 6.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협의)를 처리하면서 산지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 20% 만큼의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음에도 [표 2]와 같이 11건에 대하여는 복구비를 산정하고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중복 계상하여 총 218,549천 원 상당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과다 예치 받음으로써 민원인에게 약 2,230천 원의 경제적 부담을 주었다.

1) 이행보증금 및 산지복구비 예치방법 변경 검토보고(○○○ ○○○-15282, 2020. 6. 12.)

[표 2] 개발행위이행보증금 및 산지복구비 기준 초과예치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납부자	사업명	총공사비 (A)	이행보증금 예치액(B)	산지복구비 예치액(C)	총공사비의 20% (D=A*0.2)	초과예치 금액 (E=(B+C)-D)
합계	11건		1,800,380	363,236	215,389	360,076	218,549
1		단독주택	290,200	58,040	46,060	58,040	46,060
2		창고시설	252,000	50,400	33,669	50,400	33,669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222,200	44,440	19,544	44,440	19,544
4		단독주택	83,900	16,780	7,946	16,780	7,946
5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331,300	66,260	9,753	66,260	9,753
6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7,590	1,518	22,023	1,518	22,023
7		제1종근린생활 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 시설(사무소)	98,890	19,778	17,112	19,778	17,112
8		단독주택	151,700	30,340	16,091	30,340	16,091
9		단독주택	108,600	24,880	13,084	21,720	16,244
10		단독주택	92,000	18,400	12,450	18,400	12,450
11		단독주택	162,000	32,400	17,657	32,400	17,657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은

①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 예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 지방○○○○ ○○○(현 ○○○○○), 지방○○○○ ○○○(현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책임자 ○○○ 지방○○○○ ○○○(현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과 산지복구비를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적정하게 다시 산출하여 예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 요구 및 통보

제 목 산지전용 허가(협의) 복구 등 절차 미이행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현 ○○○○○)에서는 산지전용 허가(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예치 받고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근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복구비를 산림청장 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산지전용 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전용 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 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된 때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기간<sup>2)</sup>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sup>3)</sup>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복구 의무자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면 예치된 복구비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조치로 산지를 복구할 수 있다.

따라서 ○○○ ○○○(현 ○○○○○)에서는 산지전용 허가(협의) 시 재해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여야 하고, 산지전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자로부터 복구설계서를 제출받아 산지 복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복구 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예치된 복구비를 받아 대집행의 조치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

2)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①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②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을 말한다.

3) 「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1천㎡ 미만인 경우) : 1차 위반 25만 원, 2차 위반 5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현 ○○○○○)에서는 산지전용 허가(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9.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표]와 같이 1건에 대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고, 허가 기간이 만료된 5건(복구비 미 예치 1건 포함)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정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복구비의 보증기간 이내에 복구 의무자가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예치된 복구비(복구비 미 예치 1건 제외)를 받아 대집행의 조치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나 예치된 복구비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산지전용 허가기간 등 경과 현황

구 분		위 치	허가 면적 (㎡)	허 가 일	준공(예정)일	복구비 보증기간	비고
위반사항	피허가자						
허가기간 경과/ 복구비 미예치			1,535	2019-06-28	2020-08-08	미예치	
허가기간 경과/ 복구비 보증기간 경과			492	2020-03-16	2020-11-15	2021-05-15	
			705	2020-03-16	2020-11-15	2021-05-15	
			515	2020-03-16	2020-11-15	2021-05-15	
			685	2020-03-16	2020-11-15	2021-05-15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은

① 산지전용 허가(협의)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복구비를 예치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과태료 부과 및 산지복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실무담당자 ○○○ 지방○○○○ ○○○(현 ○○○)과 실무책임자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복구 등의 조치 없이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된데 대하여 「산지관리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공장설립승인 등 법정민원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정민원인 공장신설 및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에 대한 승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근거)

「산업집적법」 제13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고 함)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입주계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공장신설승인 신청은 14일 이내,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 신청은 5일 이내로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와 ○○○○○에서는 공장신설승인 신청과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을 승인 처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 처리기한을 임의로 연장시켜 [표]와 같이 법정 처리기한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초과하여 지연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표] 공장신설승인 등 법정민원 처리 지연 현황

민원명 (처리부서)	접수번호	접수일	당초 처리기한	보완 일수	불산입 일수 <sup>1)</sup>	최종 처리기한	실제 처리일자	지연 일수
공장신설승인 신청 (○○○)		19. 2.14.	19. 3. 6.	7	19	19. 4.11.	19. 4.16.	3
		19. 7.31.	19. 8.20.	11	16	19. 9.30.	19.10.11.	7
		19. 7.31.	19. 8.20.	11	16	19. 9.30.	19.10.11.	7
		20. 4.28.	20. 5.19.	22	52	20.10. 5.	20.10. 7.	2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과)		19. 2.18.	19. 2.25.	9		19. 3. 11.	19. 3.12.	1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등 법령에 근거한 불산입 기간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에서는 접수번호 ○○○ 민원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처리 중인 업무를 인사발령 후 후임자가 처리하였다는 의견은 제시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인정된다.

## 조치할 사항 ○○○○은

- ① 공장신설승인을 지연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정보공개 결정 지연 및 이의신청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개최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의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다만,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하여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기간 이내에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부분인용, 기각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정보공개를 결정 통지하였다.

[표 1] 정보공개 결정 통지 지연 처리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결정사항	통지일	처리기한	처리기간	지연일수	처리부서
	19. 1. 9.	공개	19. 1.23.	19. 1.22.	11일	1	○○○○과
	19. 4.16.	공개	19. 4.30.	19. 4.29.	11일	1	○○○○과
	20. 1. 5.	공개	20. 1.20.	20. 1.17.	11일	1	○○○○과
	20. 7.21.	공개	20. 8.20.	20. 8.19.	21일	1	○○○○과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 ○○○○○에서는 피해아동 보호자가 요청한 ○○○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회의 ‘사례판단 결과이유서’ 등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는데도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규정된 정보라고 자체 판단하여 기각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정보공개 결정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저해하였으며, 청구인이 심의회를 통해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및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처리 현황

접수번호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비고
	접수일	결정사항	신청일	통지일	결정사항	
	20.10.26.	비공개	20.11.17.	20.12. 7.	기각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정보공개 내용 및 절차 숙지가 미흡하여 지연되었고, 향후 직원 교육과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 ①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 결정 통지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통보(시정완료)

제 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대지나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그 이행을 위한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시하는 등 위반건축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 표제부(제1호 서식),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제3호 서식),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제5호 서식) 및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제7호 서식)에 ‘위반건축물’임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따라서 ○○○ ○○○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임을 표시함으로써 건축물 매수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표]와 같이 16건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서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임을 표시하지 않고, 위반내용을 기재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기간 중에 조치하였다.

[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미표기 현황

구분	행위자	위 치	위반일	시정명령일	비 고
1			2019-11-19	2019-12-10	
2			2019-05-17	2019-08-30	
3			2019-06-10	2019-07-13	
4			2019-07-03	2019-08-05	
5			2019-09-11	2019-10-29	
6			2020-02-17	2020-06-11	
7			2020-07-29	2020-09-02	
8			2020-07-29	2020-09-02	
9			2020-12-04	2021-01-22	
10			2019-04-17	2019-06-14	
11			2019-04-09	2019-06-19	
12			2019-10-28	2020-01-29	
13			2020-08-06	2020-09-24	
14			2019-07-18	2019-11-20	
15			2020-10-12	2020-11-24	
16			2019-02-08	2019-04-15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 ○○○에서는 금번 감사에 지적된 일부 건에 대하여는 업무 중 누락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바로 수정 조치하였고 앞으로 위반건축물 관리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누락된 기재사항 표시가 완료되었으나, 향후 이러한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시정완료)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통 보

제 목 법제처 권고 「필수조례」 제·개정 정비 미이행

소 관 기 관 ○ ○ ○

조 치 기 관 ○ ○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 ○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에서는 법령 공포 시 조례 위임사항 중 필수조례 정비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적기에 조례 정비를 통하여 도민이 피해 입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1년에 2회 이상 안내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각 개별법에서도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개선, 주민불편 해소, 부담완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제·개정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에서 공표한 필수 조례를 적기에 제·개정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 등 7개 부서에서는 ○○○ ○○○○○으로부터 2019년에서 2021년까지 필수 조례 정비와 관련한 ○○○도 ○○○○○의 공문을 6차례<sup>1)</sup>나 통보 받은 바 있고, ○○○의회 제234회 임시회 당시 ○○○, ○○○ 시의원 발언과 관련하여 “장기 미정비 필수조례 제·개정 촉구”<sup>2)</sup> 공문을 통해 2021년 상반기 내에 반드시 정비하도록 안내 받았음에도 [별지]와 같이 상위 법령 위임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방침 등 입안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조속히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 등을 거쳐 조례를 제·개정하고, 향후 직원교육과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도 ○○○○○-4328호(2019.5.3.), 10622호(2019.11.5.), 3604호(2020.4.2.), 5570호(2020.6.22.), 6096호(2021.6. 17.), 6955호(2021.7.7.)

2) ○○○ ○○○○○-4386호(2019.5.3.), 862호(2021.1.21.), 10882호(2021.9.14.)

조치할 사항 ○○○○은

법제처 권고 법령 위임 「필수조례」를 조속히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민원처리 업무 지연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청된 민원을 ○○○○○에서 분류·접수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면 담당부서에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원처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질의 민원은 14일, 법령 외의 질의민원은 7일, 건의민원은 14일, 고충민원은 7일에서 28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한편 ○○○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7,586건의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처리하였고 ○○○○○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를 매일 게시하여 민원처리 잔여일과 처리기한 초과 여부를 공지하고 있으며, 매월 “민원처리 실태 점검결과 보고”를 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통보해 오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각종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하되, 그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등 민원처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 등 12개 부서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별지]와 같이 총 6,147건의 민원을 「민원처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7일을 넘겨 지연 처리하는 등 민원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특히 ○○○ ○○○○○ 지방○○○○ ○○○는 불법 주정차 관련 등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5,924건의 민원을 최소 2일에서 최대 33일 지연 처리하였고,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1,095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103건의 민원은 처리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13일을 넘겨 지연처리 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 관련부서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민원처리기한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 ① 「민원처리법」에 따른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지연 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 실무책임자 ○○○○○ 지방○○○○ ○○○(현 ○○○ ○○○), 지방○○○○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③ 민원처리 지연으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민원심사관 및 자체감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후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업무 처리 시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허가 이행의 담보로 이행보증금을 받아 예치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2장 제5절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게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이행보증금 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고, 현금 또는 보증서(보험의 보증기간은 허가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이어야 한다)를 예치하게 한 후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 ○○○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한 후,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간 만료 전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등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기간 중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가 허가한 개발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 ○○○에서는 [표]와 같이 2019년에 허가한 28건과 2020년에 허가한 8건 등 총 36건의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 처리되지 않고, 허가기간과 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허가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개발행위허가 및 이행보증금 보증기간 만료 미조치 세부내역

연번	납부자	사업명	이행보증금 (천원)	개발행위허가 준공예정일 <sup>1)</sup>	이행보증증권 만료일	비고
1		산지일시사용	25,200	2020. 01. 10.	2020. 07. 10.	2019
2		단독주택	94,800	2021. 01. 24.	2021. 07. 24.	2019
3		단독주택	10,520	2020. 02. 06.	2020. 08. 06.	2019
4		단독주택	77,000	2020. 02. 29.	2020. 08. 31.	2019
5		단독주택	5,800	2021. 03. 03.	2021. 09. 03.	2019
6		제1종근린생활시설	11,800	2021. 03. 11.	2021. 09. 11.	2019
7		단독주택	36,800	2020. 03. 14.	2020. 09. 14.	2019

연번	납부자	사업명	이행보증금 (천원)	개발행위허가 준공예정일 <sup>1)</sup>	이행보증증권 만료일	비고
8		단독주택	35,860	2021. 03. 17.	2021. 09. 17.	2019
9		단독주택	108,000	2021. 03. 28.	2021. 09. 28.	2019
10		단독주택	167,200	2021. 04. 08.	2021. 10. 08.	2019
11		제2종근린생활시설	1,212	2020. 04. 17.	2020. 10. 17.	2019
12		단독주택	98,400	2020. 04. 18.	2020. 10. 18.	2019
13		제1종근린생활시설	29,800	2020. 04. 24.	2020. 10. 24.	2019
14		제1종근린생활시설	2,712	2020. 05. 27.	2020. 11. 27.	2019
15		농지조성	3,674	2020. 06. 10.	2020. 12. 10.	2019
16		제1종근린생활시설	11,560	2020. 07. 23.	2021. 01. 23.	2019
17		제2종근린생활시설	2,880	2020. 07. 02.	2021. 01. 02.	2019
18		제1종근린생활시설	8,300	2020. 07. 23.	2021. 01. 23.	2019
19		단독주택	141,800	2020. 08. 05.	2021. 02. 05.	2019
20		농지조성	8,500	2020. 08. 19.	2021. 02. 19.	2019
21		공장부지 증설사업	5,600	2020. 08. 22.	2021. 02. 22.	2019
22		단독주택 부지증설	1,580	2020. 11. 29.	2021. 05. 29.	2019
23		단독주택	6,760	2020. 09. 09.	2021. 03. 09.	2019
24		단독주택	9,000	2020. 09. 09.	2021. 03. 09.	2019
25		단독주택	116,000	2020. 09. 11.	2021. 03. 10.	2019
26		농가창고	3,300	2020. 11. 17.	2021. 05. 17.	2019
27		제1종근린생활시설	30,760	2020. 11. 25.	2021. 05. 25.	2019
28		단독주택	4,070	2020. 12. 19.	2021. 06. 18.	2019
29		단독주택	13,440	2021. 01. 01.	2021. 07. 01.	2020
30		단독주택	8,540	2021. 01. 01.	2021. 07. 01.	2020
31		제2종근린생활시설	32,032	2021. 03. 23.	2021. 09. 23.	2020
32		농로개설	114	2021. 04. 06.	2021. 10. 6.	2020
33		제1종근린생활시설	1,920	2021. 04. 19.	2021. 10. 19.	2020
34		제2종근린생활시설	4,640	2021. 04. 20.	2021. 10. 20.	2020
35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4,440	2021. 04. 07.	2021. 10. 07.	2020
36		제1종근린생활시설	2,140	2021. 03. 12.	2021. 09. 12.	2020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 ○○○에서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인정하며 향후 개발행위허가 현장에 대해 허가 이후에도 허가기간 및 개발행위이행보증금 등의 관리를 적극 행정 업무하여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준공미도래로 인하여 준공예정일 기재

## 조치할 사항 ○○○○은

- ① 개발행위허가와 이행보증금 예치 등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 지방○○○○ ○○○(현 ○○○○○), 지방○○○○ ○○○, 지방○○○○ ○○○, 지방○○○○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책임자 ○○○ 지방○○○○ ○○○(현 ○○○○○), 지방○○○○ ○○○, 지방○○○○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 ② 개발행위 허가기간 및 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 만료된 36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정보공개 결정 지연 및 이의신청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의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쳤거나 단순·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청구인 또는 제3자가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심의회를 개최하여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기간 이내에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인용, 기각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기간 중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를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가. 정보공개 결정 통지 지연 처리

○○○ ○○○○○를 비롯한 10개 부서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기간연장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표 1]과 같이 처리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13일 초과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표 1] 정보공개 결정 통지 지연 처리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결정사항	처리기한	처리기간	통지일	지연일수	처리부서	처리자
	2019.01.14	부존재	2019.01.28	17일	2019.02.11	7일	○○○○	
	2019.01.16	민원처리	2019.01.29	12일	2019.01.31	2일	○○○○	
	2019.03.29	비공개	2019.04.11	18일	2019.04.23	8일	○○○○	
	2019.02.25	부분공개	2019.03.11	13일	2019.03.14	3일	○○○○	
	2019.03.21	부분공개	2019.04.03	23일	2019.04.22	13일	○○○○	

접수번호	접수일	결정사항	처리기한	처리기간	통지일	지연일수	처리부서	처리자
	2019.04.27	부존재	2019.05.13	13일	2019.05.16	3일	○○○○	
	2019.09.24	비공개	2019.10.10	12일	2019.10.14	2일	○○○○	
	2019.10.15	부존재	2019.10.28	13일	2019.10.31	3일	○○○○	
	2019.06.01	부분공개	2019.06.17	14일	2019.06.21	4일	○○○○	
	2019.09.19	부존재	2019.10.02	11일	2019.10.04	1일	○○○○	
	2019.10.14	부존재	2019.10.25	15일	2019.11.01	5일	○○○○	
	2019.10.22	부분공개	2019.11.04	12일	2019.11.06	2일	○○○○	
	2019.11.05	비공개	2019.11.18	13일	2019.11.21	3일	○○○○	
	2019.11.08	비공개	2019.11.21	12일	2019.11.25	2일	○○○○	
	2019.12.09	부존재	2019.12.20	11일	2019.12.23	1일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없이 정보공개 거부

○○○ ○○○○○ 등 2개 부서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표 2]와 같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는데도 이의신청기간 미도래 등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함으로써 정보공개 결정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저해하였으며, 청구인이 심의회를 통해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및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처리 현황

접수번호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처리부서	처리자
	접수일	결정사항	신청일	통지일	결정사항	사유		
	<b>2019.04.08</b>	비공개	<b>2019.04.20</b>	<b>2019.04.24</b>	기각	이의신청기간 미도래	○○○○	
	<b>2019.08.26</b>	비공개	<b>2019.09.06</b>	<b>2019.09.18</b>	기각	비공개 정보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 ○○○○○, ○○○, ○○○○○, ○○○, ○○○에서는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향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지연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 ○○○○○에서는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 지정 알림을 받지 못해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와 ○○○에서는 해당정보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어 정보공개 결정 통지가 지연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 ①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 및 통지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어선등록 및 낚시어선업 신고 민원 처리 지연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 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법정민원인 어선(변경)등록 및 낚시어선업(변경) 신고에 대한 승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근거)

「어선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민원 처리 기간은 어선등록은 2일, 어선변경등록은 즉시(3근무시간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낙시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낙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낙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설비·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낙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낙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이때 민원처리 기간은 낙시어선업 신고는 2일, 낙시어선업 변경신고는 즉시(3근무시간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어선등록 및 낙시어선업 신고 신청은 2일 이내, 어선등록변경 및 낙시어선업 변경 신고 신청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어선등록 및 낙시어선업(변경) 신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표 1]~[표 3]과 같이 새울행정 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온나라 전자문서 결재를 통해 민원인에 민원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데 처리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11일 초과하여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표 1] 어선등록 민원 지연 처리 현황

새울민원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처리기한(A)	새울처리일	통보일(B) (온나라결재)	지연일수 (C=B-A)	처리자
	2019-01-07		2019-01-08	2019-01-07	2019-01-10	2	
	2019-06-07		2019-06-10	2019-06-10	2019-06-12	2	
	2019-06-20		2019-06-21	2019-06-20	2019-06-23	2	
	2019-11-25		2019-11-26	2019-11-25	2019-12-03	7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낚시어선업 신고처리 민원 지연 처리 현황

서울민원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처리기한(A)	새울처리일	통보일(B) (온나라결재)	지연일수 (C=B-A)	처리자
	2019-01-02		2019-01-04	2019-01-02	2019-01-15	11	
	2019-01-04		2019-01-08	2019-01-04	2019-01-15	7	
	2019-01-07		2019-01-09	2019-01-07	2019-01-15	6	
	2019-04-05		2019-04-09	2019-04-05	2019-04-11	2	
	2019-04-05		2019-04-09	2019-04-05	2019-04-11	2	
	2019-06-26		2019-06-28	2019-06-27	2019-07-02	4	
	2019-07-05		2019-07-09	2019-07-05	2019-07-11	2	
	2019-07-05		2019-07-09	2019-07-05	2019-07-11	2	
	2019-07-24		2019-07-26	2019-07-24	2019-07-29	3	
	2019-07-29		2019-07-31	2019-07-30	2019-08-07	7	
	2019-07-30		2019-08-01	2019-07-30	2019-08-07	6	
	2019-09-19		2019-09-23	2019-09-19	2019-09-27	4	
	2019-09-23		2019-09-25	2019-09-23	2019-09-27	2	
	2019-09-27		2019-10-01	2019-09-27	2019-10-07	6	
	2019-10-11		2019-10-15	2019-10-11	2019-10-18	3	
	2019-10-11		2019-10-15	2019-10-11	2019-10-18	3	
	2019-10-18		2019-10-22	2019-10-18	2019-10-30	8	
	2019-10-18		2019-10-22	2019-10-18	2019-10-30	8	
	2019-10-21		2019-10-23	2019-10-21	2019-10-30	7	
	2019-10-22		2019-10-24	2019-10-22	2019-10-30	6	
	2019-10-24		2019-10-28	2019-10-24	2019-10-30	2	
	2019-10-24		2019-10-28	2019-10-24	2019-10-30	2	
	2019-10-24		2019-10-28	2019-10-24	2019-10-30	2	
	2019-11-05		2019-11-07	2019-11-05	2019-11-13	6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낚시어선업 변경 신고처리 민원 지연 처리 현황

서울민원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처리기한(A)	새울처리일	통보일(B) (온나라결재)	지연일수 (C=B-A)	처리자
	2019-01-09		2019-01-09	2019-01-09	2019-01-15	6	
	2019-04-09		2019-04-09	2019-04-09	2019-04-11	2	
	2019-05-13		2019-05-14	2019-05-13	2019-05-20	6	
	2019-07-18		2019-07-18	2019-07-18	2019-07-23	5	
	2019-07-23		2019-07-23	2019-07-23	2019-07-29	6	
	2019-07-30		2019-07-30	2019-07-30	2019-08-07	8	
	2019-08-30		2019-08-30	2019-08-30	2019-09-02	3	

새울민원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처리기한(A)	새울처리일	통보일(B) (온나라결재)	지연일수 (C=B-A)	처리자
	2019-09-06		2019-09-06	2019-09-06	2019-09-17	11	
	2019-10-16		2019-10-16	2019-10-16	2019-10-18	2	
	2019-10-24		2019-10-25	2019-10-24	2019-10-30	5	
	2019-10-25		2019-10-28	2019-10-25	2019-10-30	2	
	2020-07-23		2020-07-24	2020-07-24	2020-07-26	2	
	2020-07-24		2020-07-24	2020-07-24	2020-07-26	2	
	2020-08-03		2020-08-04	2020-08-04	2020-08-06	2	
	2020-08-20		2020-08-20	2020-08-20	2020-08-24	4	
	2020-08-28		2020-08-28	2020-08-28	2020-08-31	3	
	2020-08-28		2020-08-28	2020-08-28	2020-08-31	3	
	2020-08-31		2020-08-31	2020-08-31	2020-09-02	2	
	2020-08-31		2020-08-31	2020-08-31	2020-09-02	2	
	2020-08-31		2020-08-31	2020-08-31	2020-09-02	2	
	2020-09-01		2020-09-01	2020-09-01	2020-09-03	2	
	2020-09-02		2020-09-02	2020-09-02	2020-09-04	2	
	2020-09-23		2020-09-23	2020-09-23	2020-09-25	2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해당업무는 대부분 신규 직원들이 맡는 업무로 항상 민원응대에 바쁘다보니 민원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깊이 반성하며, 향후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 ① 어선등록 및 낚시어선업(변경) 신고 민원을 지연 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이하 “위반건축물”이라 한다)한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는 위법건축물의 건축주·공사 시공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에 따라 시정명령은<sup>1)</sup> 2회로 하고, 이행강제금 계고는<sup>2)</sup> 1회 실시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시정명령과 10일 이상의 계고를 각 1회 실시한 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 ○○○에서는 위반건축물을 최초 적발하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2차례의 시정명령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을 계고한 다음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기간 중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제대로 하였는지 검토한 결과, ○○○ ○○○에서는 이행강제금을 1차 부과한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정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표]와 같이 46건 50,647천 원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미이행 내역

연 도	반복 부과 대상(건)	미부과 대상(건)	미부과 금액(천원)
계	46	46	50,647
2019년	18	18	21,729
2020년	28	28	28,918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 ○○○○조사에 따른 위반건축물이 ○○○로 대량 통보됨에 따라

1)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 기간은 20일 이상 충분히 부여  
2) 이행강제금 계고는 10일 이상 충분히 부여

전담인력 2명이 2020. 1월부터 ○○○○조사 위반건축물을 나머지 2명이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상시 발생 위반건축물을 담당하는 등 부족한 정비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위반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코로나 19의 장기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극심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민원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2021. 1월부터 2021. 6. 30.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등 시정을 최대한 독려하면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이행중이며, 향후 「건축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토록 하겠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 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위반건축물 46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②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건축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및 공사감리자 행정처분 소환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2018. 11. 14. ○○○ ○○○ ○○-○번지의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한 후 2019. 1. 29.에 공사를 위한 착공신고 수리를 했고, 2019. 5. 30.에 허가사항 변경신청 되어 [표 1]과 같이 변경허가 하였다.

[표 1] ○○○ ○○○ ○○○ 건축허가 현황

건축주	위 치	대지면적(m <sup>2</sup> )	연면적(m <sup>2</sup> )	동수/층수	허가일	착공일	변경허가
		1,580.3	1,416.8	1동/2층	2018. 11. 14.	2019. 1. 29.	2019. 9. 16.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2. 건축복합민원 협의 지연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12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제10조 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 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며, 「○○○ 건축조례」 제8조에 따르면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법, 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 ○○○에서는 건축허가(변경) 민원이 접수가 된 후 또는 보완 요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기한 내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건축주가 2019. 5. 30.에 신청한 허가사항 변경 신청에 대하여 민원이 접수된 후 지체없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도 처리기한이 임박하여 같은 해 6. 5.에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도면 수정, 구조계산서 등을 같은 해 7. 11.까지 제출하도록 건축주에게 보완을 통보하였고,



당초 처리예정일인 2019. 6. 7. 보다 20일이 지난 같은 해. 6. 27.이 되어서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 ○○○에서는 ○○○○○로부터 소방도면 및 계약서 제출을 보완하도록 요청을 받아 2019. 7. 5. 건축주에게 보완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7. 31. 실제 보완이 완료되었는데도 13일이 지난 같은 해 8. 13. 보완완료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요청하였다.

### 3. 민원서류 보완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 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건축주가 2019. 5. 30.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서를 같이 제출하여 허가사항변경 전 행위를 한 사항에 대한 건축주가 추인(사후허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같은 해 6. 5.에 1차 보완과 같은 해 7. 5.에 2차 보완을 요구할 때까지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해 8. 16.에 이행강제금 납부 후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불필요한 3차 보완을 통보하여 허가사항 변경 처리를 지연하였다.

## 4. 공사감리 행정처분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16조에 따르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나 신고 사항 중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5조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 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시정 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다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이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했을 경우에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법」 제110조에서는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13조에서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따라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 ○○○에서는 당초 건축허가 도면대로 시공되고 있지 않음에도 시정 또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감리자는 행정처분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에서는 건축주가 [표 2]와 같은 내용으로 2019. 5. 30. 신청한 허가사항 변경을 처리하면서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사항의 자진신고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추인 절차를 진행 중에 같은 해 7. 26. 공사감리자 ○○○(이하 ‘공사감리자’라 한다)이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하였음을 [그림 1]과 같이 보고하자, 같은 해 8. 23. 건축주를 「건축법」 제16조 및 제22조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표 2] 설계변경 사항 및 설계변경 전 후 배치도

○ 설계변경 사항 : 1미터 이상의 건축물 위치 이동(약 9m), 건축물 연면적 변경(1,416㎡ → <b>1,195.75㎡</b> ), 건축물 용도변경(창고시설 → <b>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b> )	
설계변경 전 배치도('18. 10. 10.)	설계변경 후 배치도('19. 9. 16.)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공사의 공정이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했을 경우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허가사항변경이 9미터 가량의 건축물의 위치이동이 수반되어 공사감리자는 당초 건축허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공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인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공사감리 업무에 소홀하였는데도 건축주만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지 않는 등 그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다.

[그림 1]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 ○○○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후 지체없이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했어야 하나 인허가 접수 건이 많아 건축복합민원 협의 요청을 지연하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보완요청은 민원 취하의 우려와 이행강제금 부과 후 납부기한(20일)을 감안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었으며, 건축공사의 감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되지 않고 있을 때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나 건축주의 사전입주에 대한 위법 건축공사 보고서를 설계변경 전 시공완료한 행위도 포함한 보고로 오인하여 공사감리자의 적절한 업무수행으로 판단하여 건축주만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 ①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축복합민원 협의를 지연하여 요청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설계변경 전 시공한 사항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건축허가 도면대로 시공되고 있지 않음에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 ○○동 ○○-○○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감리자인 ○○○사무소 ○○○ 건축사 ○○○을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통 보

제 목 법제처 권고 「필수조례」 제·개정 정비 미이행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와 ○○○도 ○○○○○에서는 법령 공포 시 조례 위임사항 중 필수 조례 정비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적기에 조례 정비를 통하여 도민이 피해 입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1년에 2회 이상 안내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각 개별법에서도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개선, 주민불편 해소, 부담완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자치 입법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제·개정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에서 공포한 필수 조례를 적기에 제·개정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 등 8개 부서에서는 ○○○ ○○○○○○○○으로 부터 2019년에서 2021년까지 필수 조례 정비와 관련한 법제처와 ○○○도 ○○○○○의 공문을 4차례<sup>3)</sup> 이상 통보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조례 등을 정비하도록 안내 받았음에도 [별지]와 같이 상위 법령 위임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방침 등 입안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3) ○○○ ○○○○○○○-4460호(2019.5.7.), 7769호(2019.8.9.), 8491호(2019.8.30.), 9446호(2019.10.1.), 11291호(2019.11.22.), 410호(2020.1.13.), 560호(2020.1.17.), 1817호(2020.2.23.), 3356호(2020.4.8.), 3902호(2020.4.24.), 4482호(2020.5.12.), 5459호(2020.6.10.), 6264호(2020.7.2.), 11713호(2020.12.9.), 12133호(2020.12.22.), 89호(2021.1.6.), 394호(2021.1.13.), 6043호(2021.6.9.), 6256호(2021.6.15.), 6376호(2021.6.18.), 6506호(2021.6.22.), 7113호(2021.7.8.)  
○○○도 ○○○○○-4328호(2019.5.3.), 10622호(2019.11.5.), 3604호(2020.4.2.), 5570호(2020.6.22.), 6096호(2021.6. 17.), 6955호(2021.7.7.)

##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법령에서 위임된 미정비 조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제·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법제처 권고 법령 위임 「필수조례」를 조속히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민원처리 업무 지연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신문고, 서울행정시스템 등으로 신청된 민원을 ○○○○○○○과 ○○○에서 분류·접수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면 담당부서에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원처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가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질의민원은 14일, 법령 외의 질의민원은 7일, 건의민원은 14일, 고충민원은 7일에서 28일 이내, 각종 관계 법령에서 따로 처리기한을 정하는 경우 해당 처리기한 내에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한편 ○○○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35,211건의 국민신문고 민원과 112,028건의 서울행정시스템 등으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 ○과 ○○○에서는 매월 “민원처리 결과보고” 및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결과보고”를 한 후 ○○○ 전 부서에 통보하고 잔여일이 임박한 민원에 대하여는 개별 민원 담당자에게 내부메신저로 통보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를 지연한 담당자는 ○○○○○○○으로 별도 통보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처분<sup>4)</sup>을 해 오고 있다.

---

4) 업무처리기한 준수와 민원처리 지연 예방을 위하여 ○○○○○○○-6182호(2019.6.28.)에 따라 수립된 기준으로 유기한 민원 처리 지연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함

- 산정기간 : 6개월 누계 기준(지연처리 1일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산정방법 : 1건당 1회(1회 훈계, 2회 이상 경징계)

※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유기한 민원 처리 지연으로 22명 주의·훈계 처분

따라서 ○○○에서는 각종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하되, 그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등 민원처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 등 8개 부서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신문고 및 서울행정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별지]와 같이 총 652건의 민원을 「민원처리법」에 정한 처리기간을 초과하여 지연 처리하였다.

특히 ○○○ ○○○○○○○에서는 2019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유기한 민원을 지연하여 처리를 실무담당자 22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주의’ 및 ‘훈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하였는데, 이들 중 지방○○○○ ○○○의 경우 2020. 6. 5. ‘주의’ 처분을<sup>5)</sup> 받은 이후에도 같은 해 12. 31.까지 25건의 민원을 계속해서 지연처리 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 ○○○ 등 관련부서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주의 촉구’(○○○○○○○○-5402호(2019.6.5.))에 따라 “4월 9일에 접수한 국민신문고 접수민원의 처리기한을 2일 경과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에 규정된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인사상 문책(주의, 훈계,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처리기한 내에 내부결재를 완료하였던 점을 감안해 금번에 한하여 「주의 촉구」 하오니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은

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민원처리 지연으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민원 심사관 및 자체감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개발행위이행보증금 기준초과 예치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와 ○○○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협의) 업무 처리 시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허가 이행의 담보로 이행보증금을 받아 예치하는 업무와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60조에 따르면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총공사비의 20%이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 ○○○와 ○○○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허가(협의)를 하면서 산지 이외의 경우 이행보증금을 총공사비의 20%이내에서 예치하여야 하고, 산지에서의 경우 이행보증금과 산지복구비는 총공사비의 20%를 초과하거나 중복 계상하여 예치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와 ○○○에서는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산지 이외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면서 [표 1]과 같이 11건에 대하여는 총 공사비 20%를 초과한 총 94,610천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추가로 예치하여 민원인에게 약 622천 원의 경제적 부담을 주었다.

[표 1]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기준 초과예치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납부자	사업명	총공사비 (A)	이행보증금 예치액(B)	총공사비의20% (C=A*0.2)	초과예치 금액 (D=B-C)
합계		11건	1,009,150	296,440	201,830	94,610
1		지상1층/단독주택/69.87	58,300	13,420	11,660	1,760
2		지상1층/단독주택/69.87	38,500	11,220	7,700	3,520
3		지상1층/단독주택/83	2,350	1,160	470	690
4		지상1층/단독주택/129.9	239,800	73,480	47,960	25,520
5		지하1~지상2층/단독주택/236.42	283,000	59,840	56,600	3,240
6		지상1층(개동)/1층근생(소매점)/359	83,400	22,400	16,680	5,720
7		지상1층/단독주택/단독주택/83.3㎡	88,000	22,740	17,600	5,140
8		지상2층/단독주택/단독주택/99.8㎡	38,800	8,520	7,760	760
9		지상2층/단독주택/단독주택/99.6㎡	34,100	8,060	6,820	1,240
10		주1/지상2층/제1종근생(소매점- 활어판매점)/758.541/지상1층/ 제1종근생(소매점)기계실/10	136,400	73,000	27,280	45,720
11		지상1층(개동)/제2종근생사무소/43	6,500	2,600	1,300	1,300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산지에서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협의)를 처리하면서 [표 2]와 같이 산지 복구비 산정한 후 총 공사비 20% 범위 내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에도 19건에 대하여 산지복구비 및 이행보증금은 총 343,933천 원 상당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과다 예치 받음으로써 민원인에게 약 2,217천 원의 경제적 부담을 주었다.

[표 2]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및 산지복구비 기준 초과예치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납부자	사업명	총공사비 (A)	이행보증금 예치액(B)	산지복구비 예치액(C)	총공사비의 20% (D=A*0.2)	초과예치 금액 (E=(B+C)-D)
합계		19건	1,878,530	427,950	291,689	375,706	343,933
1		지상1층/단독주택/96.66	18,000	3,600	5,491	3,600	5,491
2		지하1~지상2층/단독주택 (단독주택 등)/310.27	561,000	144,540	88,519	112,200	120,859
3		지상1층/단독주택/65.97	33,000	8,200	2,419	6,600	4,019
4		지상1층/단독주택/65.97	14,000	8,600	2,267	2,800	8,067
5		지상1층/단독주택/65.97	14,000	10,000	2,300	2,800	9,500
6		지상2층/제1종근생 (휴게음식점)/179.68	99,000	19,800	14,516	19,800	14,516
7		지하1~지상1/단독주택 제1종근생493.16	359,600	56,824	24,608	71,920	9,512
8		지상1층/제2종근생 (사무소및부속상가)/216.36	45,000	9,000	21,548	9,000	21,548
9		지상1층/단독주택/62.5	41,000	8,200	9,474	8,200	9,474
10		지상1층/단독주택/62.5	43,000	8,600	7,223	8,600	7,223
11		지상1층/단독주택/62.5	50,000	10,000	7,399	10,000	7,399
12		지상1층/단독주택/62.5	56,000	11,800	7,282	11,200	7,882
13		지상1층/단독주택/62.5	60,000	10,200	7,419	12,000	5,619
14		지상1층/제2종근생 (반려동물놀이터)/24.00m²	75,000	15,000	16,275	15,000	16,275

연번	납부자	사업명	총공사비 (A)	이행보증금 예치액(B)	산지복구비 예치액(C)	총공사비의 20% (D=A*0.2)	초과예치 금액 (E=(B+C)-D)
15		지상1층/제2종근생 (사무소)/84.24㎡	64,400	12,880	14,251	12,880	14,251
16		지하1층/제2종근생 (소매점, 단독주택)/366.19㎡	173,580	53,240	20,829	34,716	39,353
17		산지 개간	17,490	6,974	10,145	3,498	13,621
18		산지 개간	6,000	1,200	15,866	1,200	15,866
19		근린생활시설 및 동식물 관련시설 증축	148,460	29,292	13,858	29,692	13,458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 ○○○와 ○○○에서는 해당 부서간의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인하여 중복 예치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앞으로는 해당업무 담당자간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 및 연찬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① 개발행위허가와 이행보증금 예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 지방○○○○○ ○○○(현 ○○○), 지방○○○○○ ○○○(현 ○○○), ○○○ 지방○○○○ ○, ○○○○ ○○○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책임자 ○○○ 지방○○○○ ○○○, 지방○○○○ ○○○, 지방○○○○ ○○○(현 ○○○○○○), ○○○ 지방○○○○ ○○○(현 ○○○○○○), 지방○○○○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과 산지복구비를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적정하게 다시 산출하여 예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 요구 및 통보

제 목 산지전용 허가(협의) 복구 등 절차 미이행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현 ○○○)에서는 산지전용 허가(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재해 방어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예치 받고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근거)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 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기간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sup>1)</sup>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법 제41조에 따르면 복구의무자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면 예치된 복구비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조치로 산지를 복구할 수 있다.

따라서 ○○○ ○○○○○(현 ○○○)에서는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복구설계서를 제출받아 산지복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기간<sup>2)</sup>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복구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예치된 복구비를 받아 대집행의 조치로 산지를 복구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현 ○○○)에서는 2019. 1. 1일부터 감사일 현재 까지 총 169건의 산지전용허가(협의)를 처리하면서 [표]와 같이 허가기간이 만료된 5건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정한 기간 이내에 복구의무자가 복구설계서를 제출

---

1) 「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1천㎡ 미만인 경우) : 1차위반 25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00만원

2)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①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②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을 말한다.

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복구하지 않은 채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복구비 보증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대집행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산지전용 허가기간, 복구비 보증기간 경과 현황

구 분		위치	면적(m <sup>2</sup> )	허 가 일	준공(예정)일	복구비 보증기간	비 고
위반사항	피허가자						
허가기간 경과/ 복구비 보증기간 경과			255.0	2019. 3. 13.	2020. 11. 30.	2021. 5. 30.	허가
			323.0	2019. 1. 30.	2020. 11. 30.	2021. 5. 30.	협의
			364.0	2019. 5. 14.	2021. 3. 31.	2021. 9. 30.	협의
			341.0	2019. 5. 14.	2021. 3. 31.	2021. 9. 30.	협의
			346.0	2019. 5. 14.	2021. 3. 31.	2021. 9. 30.	협의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 ○○○○○(현 ○○○)에서는 감사 지적받은 5건에 대하여 산지전용 기간은 만료되었으나, 목적사업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효력은 유효한 관계로, 단지 산지전용기간 만료로 복구설계서를 제출 받아 산지를 복구하기에는 행정상 어려움이 있으며, 산지전용 허가 시 허가조건에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 10일전 까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하도록 안내 하였음에도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된 건으로, 향후 산지전용 기간 만료로 인한 과태료 납부 등 수 허가자에게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산지전용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① 산지전용 허가(협의)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과태료 부과 및 산지복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실무담당자 ○○○○○ 지방 ○○○○ ○○○(현 ○○○), 실무책임자 ○○○○○ 지방○○○○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복구 등의 조치 없이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된데 대하여 「산지관리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등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기타 수산 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영위를 위한 ○○○ ○○면 ○○○리 산○○○-○○ 필지 일원의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sup>1)</sup>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2019. 7. 31. [표 1]과 같이 승인하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일괄 처리하였다.

[표 1]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현황

공장규모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부지면적(m <sup>2</sup> )	3,783	4,628	845
건축면적(m <sup>2</sup> )	575.5	978.6	403.1
제조시설(m <sup>2</sup> )	332.5	691.31	358.81
부대시설(m <sup>2</sup> )	243	287.31	44.31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1) 신청인 : ○○○○ ○○○(이하 "사업자"라고 한다)

## 2. 창업 사업계획(변경) 법정민원 처리 지연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사업계획(변경)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사업계획(변경)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하여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sup>2)</sup>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에서는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은 20일 이내로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임의로 산정하여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접수한 수산물 가공 공장(굴박신장) 등의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하면서 [표 2]과 같이 새울 민원처리시스템에서 보완요구 일수를 사업자가 실제 제출한 보완 완료일 보다 16일 길게 입력·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민원처리를 지연하였다.

---

2) 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

또한 실제 보완일수를 적용하면 2019. 6. 13. 승인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를 사유로 추가 보완(2019. 6. 21.~6. 25.)과 처리기간을 연장(2019. 7. 3.~7. 31.)하여 법정 처리기한보다 35일을 초과하여 지연 처리하였다.

[표 2]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관련 법정민원 처리 지연 현황

접수 번호	접수일	당초 처리기한	보완 기간 및 일수		보완 후 처리기한		민원 처리일자	초과 일수	비고
			시스템 ①	실 제 ②	시스템 ①	실 제 ②			
	'19. 5. 7.	'19. 6. 4. (20일)	'19. 5. 15. ~ 6. 13.(21일)	'19. 5. 15. ~ 5. 21.(5일)	'19. 7. 3.	'19. 6. 12.	'19. 7. 31.	<b>35</b>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3.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따르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할 때 공장설립 등의 승인,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에 따르면 수산물 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허가대상행위의 규모,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르면 법 제5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창업계획(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2019. 5. 7. 사업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창업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접수하여 같은 해 5. 10. ○○○○○○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협의를 요청하였고, ○○○○○○로부터 같은 해 6. 2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았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개최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같은 해 7. 31. 창업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를 함께 처리하였다.

또한 ○○○ ○○○○○○에서는 처리기한 연장(2019. 7. 3. ~7. 31.) 등을 위해 2019. 7. 1. ○○○○○○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추진계획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처리 기한을 연장하였음에도 안건 상정 등의 후속 절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7. 16. ○○○로부터 위 사업계획(변경)과 관련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등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같은 해 7. 18. ○○○와 ○○○○○○○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협의)를 회신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 ○○○○○○에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공장승인 업무의 연찬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에서는 정기인사 발령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에 건축변경에 따른 협의 공문이 접수되었고, 해당 사안이 ○○○○○○로부터 창업사업변경 승인 협의 요청 중임에도 관련법령을 미처 숙지를 못하여 해당 사안이 도시계획심의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변경 사항으로 판단하여 건축변경신고에 따른 ○○○에 회신하면서 ○○○○○○에도 참고사항으로 회신한 것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 ① 창업사업계획(변경) 법정민원을 지연 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창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책임자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 ③ 수자원보호구역 내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④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정보공개 결정 지연 및 이의신청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의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쳤거나 단순·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청구인 또는 제3자가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심의회를 개최하여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기간 이내에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인용, 기각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기간 중 2019. 1월부터 2020. 12월까지 거제시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를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가. 정보공개 결정 통지 지연 처리

○○○ ○○○○○를 비롯한 11개 부서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기간연장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표 1]과 같이 처리기한을 1~2일 초과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표 1] 정보공개 결정 통지 지연 처리 현황

연번	처리부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정사항	처리기한	처리기간	통지일	지연일수
1	○○○○과		2019.02.20	공개	2019.03.07	11일	2019.03.08	1일
2	○○○○과		2019.03.21	정보 부존재	2019.04.03	11일	2019.04.04	1일
3	○○○○과		2019.03.21	공개	2019.04.03	11일	2019.04.04	1일
4	○○○○과		2019.03.21	정보 부존재	2019.04.03	11일	2019.04.04	1일
5	○○○○과		2019.04.23	공개	2019.05.07	11일	2019.05.08	1일

연번	처리부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정사항	처리기한	처리기간	통지일	지연일수
6	○○○○과		2019.04.24	공개	2019.05.08	11일	2019.05.09	1일
7	○○○○과		2019.05.18	정보부존재	2019.05.31	11일	2019.06.03	1일
8	○○○○과		2019.05.23	공개	2019.06.05	11일	2019.06.07	1일
9	○○○○과		2019.06.04	공개	2019.06.19	11일	2019.06.20	1일
10	○○○○과		2019.06.24	부분공개	2019.07.05	11일	2019.07.08	1일
11	○○○○과		2019.07.18	공개	2019.07.31	11일	2019.08.01	1일
12	○○○○과		2019.07.23	정보부존재	2019.08.05	12일	2019.08.07	2일
13	○○○○과		2019.07.23	공개	2019.08.05	12일	2019.08.07	2일
14	○○○○과		2019.12.31	공개	2020.01.14	11일	2020.01.15	1일
15	○○○○과		2020.06.30	공개	2020.07.13	11일	2020.07.14	1일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없이 정보공개 거부

○○○ ○○○에서는 ‘○○○ ○○동 ○○-○○번지(소로2류 도로)의 보상 여부 및 절차 관련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표 2]와 같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는데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함으로써 정보공개 결정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저해하였으며, 청구인이 심의회를 통해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및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처리 현황

접수번호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처리부서	처리자
	접수일	결정사항	신청일	통지일	결정사항	사유		
	2019.05.14.	비공개	2019.05.24.	2019.06.03.	기각	비공개 정보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 ○○○, ○○○○○에서는 향후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면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정보공개 결정 및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 ①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 기각 결정 및 통지한 실무 담당자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등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제안 받은 의견에 대해 30일 이내에 처리·답변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청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제안 받은 의견에 대해 30일 이내에 처리·답변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현 ○○○○○○○)에서는 [표]와 같이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신청된 3건의 민원을 신청일로부터 266~297일이 경과한 후 2020. 1. 9.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민원의 답변부서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 부서에서는 5일만에 민원답변을 완료하였지만, 최종 민원처리까지 241~271일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2019. 8. 2. ○○○도의 요청<sup>1)</sup>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실적 등을 제출하면서 신고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는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예산낭비신고센터 민원 접수 처리 지연 현황

접수번호	신고일	접수일	지연일수	완료일	처리부서
	'19.01.30.	'20.01.09.	297일	'20.01.14.	○○○○○
	'19.03.09.	'20.01.09.	266일	'20.01.14.	○○○○○
	'19.03.24.	'20.01.09.	282일	'20.01.14.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1) ○○○도 ○○○○○-10540('19. 8. 1.)

## 관계기관 의견

○○○ ○○○○○○○에서는 실무담당자가 전임자로부터 “해당업무는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민원 접수 시 메일이나 문자로 접수안내를 받으면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는 인수인계를 받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업무권한을 국민신문고 기관운영부서인 ○○○○○○○○ ○○팀에서 업무권한을 부여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별도 권한을 받지 않아 “민원 접수안내(통지)”를 메일이나 문자로 통보 받지 못해 예산낭비신고센터 민원접수 건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당 시스템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 처리건수가 “해당없음”으로 2019. 8. 1. ○○도에 실적을 제출하였으나, 민원접수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보류하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으며, 업무인계인수 과정에서의 착오 등으로 의도치 않게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게 된 점을 감안해서 선처를 바라며 앞으로 업무 인계인수 등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 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는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이하 “위반건축물이라 한다)한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sup>2)</sup>하는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는 위법건축물의 건축주·공사 시공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 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sup>3)</sup> 하여야 한다.

---

2)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는 '①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10일) → ② 시정명령 처분 통보(30일) → ③ 시정 촉구 통보(20일) → ④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처분 계고 통보(30일) 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처분 통보'의 순서로 진행됨

3) 「○○○ 건축조례」 제20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횟수는 1년에 1회로 규정

그리고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시정명령과 10일 이상의 계고를 각 1회 실시한 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 ○○○에서는 ‘위반건축물’을 최초 적발하면 지체없이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2차례의 시정명령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을 계고한 다음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242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하면서 [표]와 같이 3건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한 다음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이행강제금 2,505천 원을 부과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위반상태가 시정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이행강제금 미부과 세부내역

(단위 : m<sup>2</sup>, 천원)

연번	행위자	위 치	위반내용	위반면적	적발일	시정명령일	행정예고일	미부과금액
	합계							2,505
1			불법증축	18.0	2019. 9. 10.	2019. 9. 10.	2020. 1. 9.	1,117
2			불법증축	7.12	2019. 10. 1.	2019. 10. 1.	2021. 9. 8.	608
3			불법증축	10.7	2019. 11. 7.	2019. 11. 7.	2021. 4. 7.	780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 ○○○에서는 ○○○(○○동 ○○-○○번지)에 이행강제금 미부과한 사실에

대하여 2019년 9월에 위반건축물로 발각되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에 따라 처분사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조치하는 중 의견 제출서를 받았으며, 2020년 6월 위반건축물이 시정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2건에 대하여는 담당자간의 업무 연찬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과·징수하지 않고 누락된 사실이 있고 2건의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지체없이 부과할 예정이며, 향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 ①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②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건설공사 선급금 지급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급금 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등 선급금의 적정 지급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수급 받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5-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급금 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같은 절 “5-나”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sup>4)</sup> 이내에 하수급자

에게 선급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급금 잔액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 ○○○에서는 수급인이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하수급인에게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급금 잔액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표]와 같이 ‘○○ ○○ ○○○○사업’ 등 3개 사업장의 경우 ○○○○(주) 등 3개 수급인이 선급금 계 685,000천 원을 지급받고 15일 이내 ○○○○(주) 등 3개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계 160,283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선급금 잔액에 대해서 선급금 반환 청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선급금 지급 관리·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수급인	수급인 계약금액	수급인 선급금 수령현황		하도급 현황		
			일 자	금 액	하도급계약 통보일	하수급인	선급금 미지급액
합 계	3건	2,090,563	-	685,000	-	3건	160,283
○○○○○○○○○ ○○사업		192,647	2019.11.5.	69,000	2019.11.13.		29,545
○○○○○공사		257,916	2019.4.15	66,000	2019.4.25.		35,268
○○○○○○○사업		1,640,000	2020.2.12.	550,000	2020.2.20.		95,470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 ○○○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배분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 연찬 미숙으로 인하여 확인하지 못하였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 ① 선급금 지급 관리·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도시계획위원회 불필요한 행정절차 추가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113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임사항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군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가이드라인<sup>5)</sup>」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법·지침과 무관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요구<sup>6)</sup>를 지양하여야 한다.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755(2019.1.29.) 1-4-2

6) 불필요한 행정절차 예시 : 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설치 요구 등

따라서 ○○○ ○○○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심의 또는 자문한 건에 대하여 법·지침과 무관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2019. 1. 1.부터 2020. 12. 31. 기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안건 중 2020. 11. 27. 제출된 “○○면 ○○리 ○○시설(○○장) 신축”건에 대하여 “야영장시설 입지에 대한 연접 주거지(○○면 ○○마을) 주민들과 합의 검토”라는 사유로 재심의 결정하였으며, 재심의 결정의 주된 사유로 마을주민과 사전합의(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해당함에도 자체 추가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민원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2020. 12. 21. 신청인이 심의의견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같은 해 12. 29.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동일한 사유로 조건부 수용<sup>7)</sup>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고 주민과 사전합의(동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2021. 1. 21. 건축허가 신청서 취하원을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 ○○○에서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7) 조건부 수용 사유 : ① 야영장 시설 입지에 대한 연접 주거지 주민들과의 합의사항이 우선이되어야 하므로 주민과의 합의 이후 사업 추진 바람. ② 재심의 미반영(야영장 시설 입지에 대한 연접주거지 주민들과 합의 검토) 내용을 처리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조치할 사항 ○○○○은

①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실무담당자 ○○○ ○○○○  
○○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책임자 ○○○ 지방○○○○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주의**)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시정 요구

제 목 공용차량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지연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부서의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부서별로 공용차량의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관리·사용하고 있다.

### 2.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84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자동차의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정기검사 통지서를 받는 경우 자동차 검사를 받아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를 비롯한 3개 부서에서는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를 받고도 [표 1]과 같이 차량 4대에 대해서 최소 1일에서 최대 6일 동안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여 공용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현황

(단위 : 원)

연번	사용부서	차량번호	검사기한	검사일	지연 일수	과태료		
						부과금액	부과일자	납부일자
	합 계					68,000		
1	○○○○○○		20.04.27.	20.04.28.	1일	16,000	20.05.04.	20.05.20.
2	○○○○○○		20.06.12.	20.06.17.	5일	16,000	20.07.01.	20.07.01.
3	○○○○○○		20.07.14.	20.07.20.	6일	16,000	20.08.03.	20.08.28.
4	○○○○○○		20.10.05.	20.10.08.	3일	20,000	20.12.08.	20.12.23.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3. 공용차량 책임보험 지연 가입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sup>8)</sup>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따라서 ○○○는 공용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매년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책임 보험 만기 등을 통보받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보장이 가능하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을 지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세출예산으로 납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과 ○○○○○에서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책임보험 만기 통보를 받고도 담당자의 업무 태만으로 의무보험에 늦게 가입하여 2020. 11. 3.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등 [표 2]와 같이 차량 3대(이륜차량 포함)에 대한 책임보험을 최소 1일에서 최대 172일 동안 지연 가입하여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보장에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 ○○○○○에서는 책임보험 가입 지연으로 부과된 과태료 24만 원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지출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공공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하였다.

[표 2] 공용차량 책임보험 지연 가입 여부

(단위 : 원)

연번	사용부서	차량번호	보 험 만료일	보 험 재가입일	지연일수	과태료		
						부과금액	부과일자	납부일자
	합 계					264,000		
1	○○○○○		20.05.08.	20.11.16. (불용처리)	172일	240,000	20.11.03.	20.11.13.
2	○○○○○		20.10.17.	20.10.18.	1일	12,000	20.11.03.	20.11.13.
3	○○○○○		20.10.25.	20.10.29.	4일	12,000	20.11.12.	20.11.27.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 ○○○○○에서는 공용차량 관리를 하면서 자동차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아 공용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면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 ① 책임보험 가입을 지연한 실무담당자 ○○○ ○○○○○○ ○○○(현 ○○○○○)과 책임보험 가입 지연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세출예산으로 부적정하게 납부한 실무책임자 ○○○ ○○○○○○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에서 공공운영비로 지출한 책임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 24만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통보(시정완료)

제 목 유류구매카드 인센티브 세입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부서별로 현장점검 등 출장 업무추진을 위해 보유·관리 및 사용하는 공용차량의 유류구입을 위해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sup>9)</sup> 제Ⅳ장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 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서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유류구매카드 사용으로 인해 적립된 인센티브를 조회하여 연 1회 이상 세입조치를 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9) 행정안전부 예규로 운영되던 연도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통합되었고, 구매카드의 발급 및 사용은 [별표7]에서 정하고 있음.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21. 10. 25.~10. 29) 중 ○○○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사용 적립금에 대한 세입조치를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2019년과 2020년에 적립된 포인트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유류구매카드 결제 통장에 입금되었는데도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기간 중에 세입조치를 하였다.

[표] 유류구매카드 인센티브 세입 미조치 내역

(단위 : 원)

연번	사용부서	카드사	포인트 현금입금		세입조치		잔여포인트
			입금일	금 액	세입일	금 액	
	합 계			1,800,790		1,800,790	
1	○○○		'19.11.22.	95,130	'21.10.26.	95,130	0
2			'20.11.26.	34,410	'21.10.26.	34,410	0
3	○○○		'19.11.22.	162,830	'21.10.26.	162,830	0
4			'20.11.26.	99,820	'21.10.26.	99,820	0
5	○○○		'19.11.22.	43,970	'21.10.26.	43,970	0
6			'20.11.26.	61,320	'21.10.26.	61,320	0
7	○○○		'19.11.22.	670,110	'21.10.26.	670,110	0
8			'20.11.26.	409,610	'21.10.26.	409,610	0
9	○○○		'19.11.22.	156,880	'21.10.25.	156,880	0
10			'20.11.26.	66,710	'21.10.25.	66,710	0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 ○○○에서는 2019년부터 계좌로 자동 환급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업무 인지에 미숙한 부분을 인정하고, 포인트 적립액은 세입조치('21. 10. 26.) 하였으며, 추후 연 1회 발생하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에 대하여 환급되는 즉시 세입 조치를 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유류구매 카드 적립금을 세입 조치함으로써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이러한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시정 완료)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통 보

제 목 법제처 권고 「필수조례」 제·개정 정비 미이행

소 관 기 관 ○ ○ ○

조 치 기 관 ○ ○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 ○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와 ○ ○ ○도 ○ ○ ○ ○ ○에서는 법령 공포 시 조례 위임사항 중 필수 조례 정비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적기에 조례 정비를 통하여 도민이 피해 입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1년에 2회 이상 안내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각 개별법에서도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개선, 주민불편 해소, 부담완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제·개정 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오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에서 공표한 필수 조례를 적기에 제·개정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 등 6개 부서에서는 ○○○ ○○○○○○○○으로 부터 2019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필수 조례 정비와 관련한 법제처와 ○○○도 ○○○○○의 공문을 4차례<sup>10)</sup> 이상 통보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조례 등을 정비하도록 안내 받았음에도 [별지]와 같이 상위 법령 위임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방침 등 입안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10) ○○○ ○○○○○○○-5307호(2019.5.3.), 10113호(2019.8.8.), 1782호(2020.2.7.), 8295호(2020.6.11.), 10233호(2020.7.17.), 3379호(2021.3.3.), 7797호(2021.5.27.), 11069호(2021.7.27.)  
○○○도 ○○○○○-4328호(2019.5.3.), 10622호(2019.11.5.), 5570호(2020.6.22.), 8638호(2020.9.9.), 6096호(2021.6. 17.), 6955호(2021.7.7.)

##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법제처 권고 법령 위임 「필수조례」를 조속히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민원처리 업무 지연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신문고, 서울행정시스템 등으로 신청된 민원을 ○○○○○에서 분류·접수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면 담당부서에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원처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질의민원은 14일, 법령 외의 질의민원은 7일, 건의민원은 14일, 고충민원은 7일에서 28일 이내, 각종 관계 법령에서 따로 처리기한을 정하는 경우 해당 처리기한 내에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민원처리법」 제25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8,289건의 국민신문고 민원과 97,549건의 새올행정시스템 등으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에서는 매월 “일반·고충민원 처리상황 및 운영실태 보고”를 한 후 ○○○ 전 부서에 통보하고 잔여일이 임박한 민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 “유기한민원 처리기한 만료예고”와 개별 민원 담당자에게는 내부메신저 등으로 통보<sup>11)</sup>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독려해 오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각종 민원을 접수한 경우 「민원처리법」에 따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하되, 그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그로 인한 민원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민원심사관을 두어 민원의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민원처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 등 4개 부서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을 처리하면서 [별지]와 같이 총 52건의 민원을 「민원처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을 최소 1일부터 최대 6일 넘겨 지연 처리하였으며, ○○○ 등 18개 부서에서는 같은 기간 새올행정시스템 등으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별지]와 같이 총 181건의 민원을 「민원처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간을 “시간” 단위 초과를 포함 최소 1일부터 67일 이상 넘겨 지연 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 ○○○○○에서는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매월 ○○○○에게 “일반·

---

11) 민원처리 잔여일이 2일 이하인 담당부서에 “유기한민원 처리기한 만료예고”[○○○○○○-19301호(2019.10.22.), 20601호(2019.11.12.), 22810호(2019.12.16.), 1964호(2020.1.31.), 2059호(2020.2.3.)]를 통보하여 처리기한내 민원을 조치하도록 하였음



고충민원 처리상황 및 운영실태 보고”를 해오면서도 ○○○ 등의 민원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연민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 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민원처리 지연으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민원심사관 및 자체감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